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 국비 100%

여야, 합의 처리… 지방 부담 삭제
위성곤 “지자체에 신속 교부·집행”
국가폭력 트라우마 지원 등 증액
채무조정 형평성 놓고 거센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말했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과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 지원 기관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런 가운데 이틀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

李 대통령, 내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국정 상황 설명…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밝혔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번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이어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찬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 및 외교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시의회, ‘2천억대 배상 요구’ 나주 SRF 운영사 규탄

“청정빛고을, 운영주체 책임 외면”
“시민에 손실 전가… 상식 어긋나”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가 1일 성명을 내고 나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손실보전금 2100억원을 요구한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청정빛고을은 당초 78억원이던 손실보전금 요구액을 최근 2100억 원으로 27배 이상 증액해 광주시에 청구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이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귀책 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 측 손실의 상당 부분이 자체 경영 오판과 내부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못박았다. SRF 설비 성능 미달로 가동시간이 늘고 정원의 인력 채용 등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시민 세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청정빛고을은 중재를 종료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사업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못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고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빛고을은 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포스코이앤씨가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 SRF를 운영하고 운영 종료 후에는 시설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계약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처리 물량이 줄었고, 이후 청정빛고을은 손실 보전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청정빛고을은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최근 진행된 6차 중재심리에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 제시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 내일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처리 전망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상법 개정안은 4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

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전날 이른바 ‘국민청문회’란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하루만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시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 에 대해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검찰 개혁에 강한 우려 표명

심우정(사진)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



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

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연합뉴스